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협조체계 구축

전북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 갖고 상황 점검 '즉각분리제도' 적극 이행 위해 시설 단계적 확충·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적극 대응

전북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적극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再)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분리·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도는 최근 시행한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췄다.

지난달 29일 전북도는 경찰청과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지자체 즉각분리제도 시행 관련 아동학대 대응강화, 경찰청 아동학대 사건 대응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교육청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상담·심리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치료 운영 등 기관별 추진현

황을 발표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도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에 앞서 즉각분리 제도 시행 사전 준비를 위해 도와 시·군간 '즉각분리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시·군 회의를 통해 즉각분리제도 추진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전북도는 즉각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도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확대한다.

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올해 설치·운영하고, 현재 3개소인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연차별로 확충해 2023년에는 1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군산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보호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가정을 발굴했다.

이들 위탁가정에는 전문 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과 아동용품 구입비(1회 100만원)가 지원된다.

특히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전문적 학대관리를 위해 도내 14개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 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해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방지해나간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아동의 정서·놀이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담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수요 확대에 예상됨에 따라 조사·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한다.

현재 익산과 정읍, 남원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7명, 13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요원 22명을 배치해, 학대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시·군은 기존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연내에 도와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확충해 아동학대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살펴 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관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위기가동 발굴, 피해아동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농업 미래 이끌 청년농부 선정

청년후계농 294명
후계농업경영인 148명
전북형 청년창업농 45명

전북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후계농 294명, 후계농업경영인 148명, 전북형 청년창업농 45명 등 정예 청년농부 48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외자 포함) '청년후계농' 294명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95%), 한국농어촌공사 농

지입대 우선지원(2ha 한도)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선발된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예외자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148명에게는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90%), 영농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외자 포함) '전북형 청년창업농' 45명에게는 최대 2년간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한편, 도는 미래 농업을 선도해 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4차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전북도, 4~6월분 각 3개월 연장·공급중지 유예도 추가 실시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4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를 실시한다.

도는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1년 4~6월분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부 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 4~6월(1차), 9~12월(2차), 2021. 1~3월(3차)에 이은 4차 유예 결정이다.

기존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대상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풀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월 30일까지인 경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4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센터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1만3,096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공급 중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4차 유예도 같은 기간 함께 시행된다.

기존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도시가스 용도 : 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요금납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4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며, 같은 기간 중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지역주민과 4개 광역상수원 오염원 관리한다

전북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4개 광역상수원과 상수원 오염원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상수원 수질 오염원 위 상시 감시 및 계도를 위해 지난 2008년 80명 채용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인 인력을 확대해 2021년도에는 3월 말까지 116명을 채용, 4월 중에는 각 시·군에서 감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5월부터 상수원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지킴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바일 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녹조 발생 시 실시간 보고해 신속하게 대처, 대응이 가능한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및 유입하

천 수질이 1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상수원 수질 오염원 위 상시 감시 및 계도를 위해 지난 2008년 80명 채용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인 인력을 확대해 2021년도에는 3월 말까지 116명을 채용, 4월 중에는 각 시·군에서 감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5월부터 상수원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지킴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바일 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전북도, 한우 우량수정란 600개 무상 공급

우량수정란 무상 공급을 통한 한우 개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은 도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유

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우량수정란' 600개를 자체 생산해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한우 우량수정란'은 국가에서 인증

한 보증씨수소(KPN)의 정액에 우량암소의 난자를 수정해서 생산한다.

수정란이식을 통한 한우개량은 일반 인공수정보다 개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우뿐만 아니라, 젓소나 육우에도 이식해 한우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다.

도는 자체 생산한 수정란을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미 수정돼있는 수정란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의 한우정책 수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